

표지사진 :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서울평통사 회원 신재훈&장남희 부부. 사진 _ 오미정

| 여는 그림 |

용산협정·LPP 개정협정 위헌 소송

지난 3월 15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33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져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대미 굴욕협상으로 땅에 떨어진 민족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현진 / 사진 이정민(시민의신문 기자)

| 책을 열며 |

분단 60년, 미군주둔 60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대전충남평통사 공동대표 조 주 형

화약고라 불리던 중동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한반도에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은 요원한 일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 써야 하는 우리 민족은 무엇이 반평화적이고, 통일에 반대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언론도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 계속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공공연히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핵을 포기 하라고 목을 조이는 것은 오히려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무장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구실을 만들려는 획책일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의 성공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은 미래에 더 중대한 반평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반평화요소라고 생각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5장에 보면 점령지 통치방법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말 잘 듣는 현지 주민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통치하는 것을 꼽고 있다. 60년 전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이 써먹은 방법이 바로 이것이며, 그에 따라 친일파가 친미파로 둔갑하였고,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통치 주체 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구세력이 되어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고 있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했다하여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과거 그러한 세력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우리 내부의 반평화, 반통일 요소이기 때문에 과거청산도 평화를 여는 핵심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이 2년이 지났으므로 미국은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 상에서 더 이상 어떤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된다. 더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 모두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내외의 반평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나 이곳에서 60년을 주둔하며 분단과 반평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 온 미군은 이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떠날 때가 되었다. 다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새롭게 하여 모두 손잡고 앞으로 나가자.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공 동 길(평화군축팀), 오 혜 란(인천평통사 공동대표, 미군문제팀)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2월 10일의 북 외무성 성명 이후 한·미 외무 장관회담에 이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북 박봉주 총리의 중국 방문 등 관계국의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한 내부에서도 냉전수구세력들이 경제지원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북핵에 대항한 지하관통형 첨단정밀무기 도입 등을 들고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진영에서도 이른바 ‘북핵문제’의 원인은 도외시 한 채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거나 남과 북이 처한 현실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지향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2월 17일 평통사 논평을 토대로 시민사회진영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

북핵의 근본원인을 부시정권의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에서 찾아야

소위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 정권 붕괴를 목표로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군사 봉쇄와 압살정책에 있다. 특히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군사패권주의야말로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른 직접적 원인이다.

왜냐하면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된 3차 북핵 위기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선제공격전략을 정식화한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은 2001년 9월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를 채택한데 이어, 9·11 1주기를 맞은 2002년 9월에 선제공격내용을 담은 1-4-2-1전략을 공식화했다. 특히 부시정권은 기존의 억제전략에서 공격전략으로 전환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2002년 초에 공개하고 12월에는 대량살상무기퇴치국가전략을 통해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켈리 차관보가 북의 고농축우라늄핵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02년 10월로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 변화가 본격화되는 무렵이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맺어진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공동성명을 폐기할 구실만 찾고 있었던 부시정권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방지한다는 구실아래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특히 고농축우라늄핵개발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미국조차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실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신 군사전략에 따라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을 가해왔다.

9·11 이후 미국이 새로 채택한 1-4-2-1 신군사전략은 기존의 양대전쟁전략을 계승하되 2개의 전장에서 동시승리 및 1개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붕괴를 가능케 하는 모

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2개 전장이 중동과 동북아, 그 중에서도 이라크와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4-2-1전략을 공식화한 몇 개월 후인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스텔스기, 칼빈슨 항모 등 첨단공격용 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한미연합훈련(RSOI&FE)을 실시한 것은 위 전략의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이라크침략과 동시에 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1-4-2-1전략을 전장에 직접 적용하고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등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2003~2004년의 포타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전력증강과 군사변환, 미2사단의 평택재배치 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대북선제공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이지스함 및 PAC-3, C4I현대화, 아파치 롬보 공격용 헬기, 스텔스 전폭기 등을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배치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 미국은 2002년에 핵태세검토보고(NPR)를 통해 북을 포함하여 7개국에 대한 핵공격 준비필요성과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대북 핵전쟁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의 지하 군사시설 및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등 차세대 소형핵무기를 개발하고 올해 주한미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 사용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북, 이란, 시리아, 리비아를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해 선제공격도 마다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확산전략 채택, 북 내부붕괴와 정권교체를 겨냥한 북한인권법 제정, 북의 자금줄 봉쇄 및 이른바 전략물자의 북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불법행위 방지구상(IAI), 11개국을 끌어들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하여 북을 여러 방면에서 압박해왔다.

“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체도를 없애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북 외무성 성명은 바로 이와 같은 부시정권의 핵선제공격위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거둬들이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이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핵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북 외무성 성명과 “(북)핵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자위)수단으로서 일리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1월 미국에서의 발언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북의 핵개발은 부시정권의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부시정권이 선제공격계획을 포함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하루 속히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것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되어야

북핵문제는 관련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즉 북미양국이 상호관심사 즉,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과 북의 핵

포기를 일괄타결,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미국은 6자회담을 북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포기해야한다.

미국은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12월부터 제네바 합의에 따른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제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문제 해결이 진정한 목표라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고농축우라늄핵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핵무기화 될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목표가 북의 고립이라는 사실은 미 대선 기간 중 부시의 “미국은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해 북을 압박하고 있다”는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이 말로는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북핵문제를 대화방식으로 풀려는 것인지, 정권 교체와 체제 문제까지 손을 보려는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2005년 3월, 한겨레), “부시정부의 기본전략은 6자 회담을 통해 북을 압박해 항복을 받아내는 것”(2005년 3월, 신동아)이라며 “6자 회담은 항복문서 조인식도 재판도 아니다”며 미국의 6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대북제재조치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집권 1기에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공공연히 ‘이라크 다음은 북’이라며 북에 대한 무력 공격방침을 시사해온 부시정부가 2005년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폭정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거론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라 규정함으로써 북이 6자 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말로는 6자 회담 복귀를 말하면서도 스트라이커 여단과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위력을 떨친 키티호크 항모를 동원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엔안보리 회부가능성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봉쇄와 압박을 한층 강화해 나르고 있다. 미 의회가 북을 겨냥한 ‘독재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End Dictatorship and Assist Democracy)’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비료지원 등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북이 한국의 주적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내정간섭적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대규모 남북경제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 없다”면서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방침을 분명히 하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남북당국간 회담이 안 열리면 비료 50만 톤 지원 어렵다는 조건부 지원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북 제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강요하였듯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북 외무성 성명의 기본취지가 대결과 전쟁에 있지 않고 대화와 평화공존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에 참가할 명분과 조건이 마련되면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며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한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은 진정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에 나서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이 한국의 주적인지 밝히라’는 요구에 “북은 동포 미국은 동맹”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국내수구냉전세력들의 대북 제재요구에 부화뇌동하지 말

고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점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핵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는 미국에 맞서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군축을 실현하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조건을 마련해야 할 주체는 반미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확대해가고 있는 민족자주세력과 반전평화운동세력이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북이 처한 조건과 남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조건 마련이라는 종합적 관점 하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시민사회진영은 우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철회를 요구해 나서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와 함께 북을 자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패권전략의 희생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거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민족자주세력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정세를 변화시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으로의 무조건 복귀 외에 다른 길을 없다는 주장은 북핵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흐리게 하고 정세에 대한 주동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미국의 대북전쟁 가능성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미간의 힘관계에서 북이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주장 역시 조성된 정세의 엄중함을 간과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진영은 남북이 합의하고 인류의 보편적 염원과도 일치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무기 개발 및 배치된 핵무기를 철거하는 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향을 확고히 틀어쥐지 못하면 항상적인 미국의 선제 핵공격위협에 시달리는 북이 자위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불가피하게 보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해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염원과 배치되는 핵무기 보유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수립 및 평화군축 운동의 정당성과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민사회진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외무성 성명에 따라 북 스스로 핵무기를 종국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북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과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진영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전략 철회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평등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NPT회의에서의 채

택된 ‘핵강국들의 핵무기 폐기 약속’의 무효화 및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국제 조약화)을 거부하고 이를 오는 5월에 열리는 NPT 재평가 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진영은 NPT 재평가 회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안전 보장을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압도적인 핵무기의 우위를 선점하고서도 비핵국가에 대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한반도의 비핵화 및 세계적 차원의 핵무기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임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진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군축이라는 전망 속에서 벙커버스터 등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능력을 뒷받침하는 대북 공격적 무력의 철거와 군사훈련을 중단 투쟁시키는 투쟁에 앞장서는 한편 민족 단결의 요구에 기초하여 결성된 6·15실천남북해외 공동준비위가 민족자주와 반전평화를 기조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는 자주성을 견지하고 민주자주진영의 중심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남북해외의 반전평화, 자주통일세력의 힘을 모으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 수구냉전 체제 청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 권 오 현

2004년 세밑 여의도 국회 앞 국민 농성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했었습니다.

국가 보안법 없는 희망 새해의 벽찬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니다.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1,300여 명의 삭발, 단식 농성단이 결사 의지로 ‘끝장 단식’까지 했었지만, 역사의 무덤으로 보냈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정치권의 국민 배신으로 죽음 바로 눈앞에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수구, 냉전 집단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행패는 입에 올릴 가치조차 없겠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폐지당론 결정과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3당 합의까지 깨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미룬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행과 야합으로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방기한 것과는 관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과 투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연내 폐지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60년 이어온, 폐지 투쟁은 결코 좌절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술한 고난을 겪었던 사회 원로들로부터, 잘못된 법을 없애야 한다는 소박한 정의감으로 달려온 청소년들까지, 젓먹이를 떼어 놓고 울산, 부산, 마산, 진주, 광주, 인천 등 전국에서 달려온 젊은 어머니들로부터, 하루 일을 서둘러 끝내고 농성장으로 곧장 달려와 함께 했던 직장인들까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는 국민농성단은 단식농성과 선전 홍보, 촛불 한마당 문예 공연을 하면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과 동지적 연대감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열은 해를 넘긴 것과 관계없이 지역과 부문으로 더욱 지평을 넓히면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법 하나를 없애는 이상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제 잔재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대한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었다는 데서 그렇고, 해방과 함께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둔갑하여 오늘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새로 들어온 점령군은 국토와 민족을 분단, 분열시켰고 일제의 법령, 제도, 관행을 존속시키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권력 상층에 앉히고 민족자주, 애국 세력을 오히려 탄압, 투옥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국의 비호 아래 반공, 반북의 이념 공세로 그 자리를 굳건히 하는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기생된 반드시 청산될 집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수구냉전 세력의 청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워 연합국 승리와 함께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지만, 자주독립 통일정부 수립이란 민족적 과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새로운 점령군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고 강대국의 패권적 세계 전략에 강제 편입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 했습니다. 동, 서 냉전 체제는 더욱 심화되고 분단대치가 고착되면서 역대 독재정권은 반공, 반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분단을 악용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냉전 체제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족 자주세력과 평화통일 주장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한 해 동안 118,000여명이 입건, 투옥되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 당했습니다.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이 평화통일을 주장 했다가 사법 살인 당했고, 4월 혁명 뒤에는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백근 사회당 중앙간부 등이 그리고 유신 독재에서는 도예종씨 등 8명을, 전두환 신군부독재에서도 남민전 사건의 신항식씨 등이 사법 살인을 당하는 것을 비롯 수천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수만 명이 구속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살인 말고도 수십만 명을 좌익으로 몰아 재판 없이 학살하는 만행이 냉전 체제 아래에서 벌어졌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며 남북 대결정책을 강화했고, 반공법까지 따로 만들어 자주 통일 운동은 물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수구 냉전 체제(세력)는 사상 탄압, 분단고착, 남북 대치를 가속화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외세 의존의 사대매국 세력 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을 사대매국 세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6.15 공동선언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외면하는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60년의 부당한 강점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군의 영구 주둔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제 땅을 공짜로 내주고 군사시설비도 부담하며 첨단무기를 들여와, 동족을 죽이려는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와 전쟁 책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북에 대한 정권 붕괴를 노린 미국의 이른바 ‘북인권법’을 맹목적으로 환영하며 일부 사대매국 세력은 2,400만 달러의 대북 정권 붕괴 자금을 끌어들여 미국의 이익과 의지에 맞춰 동조 추종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북 적대 집회 등에서 언제나 성조기를 흔들며 마치 미국이 그들의 조국인 양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일 잔재, 수구 냉전, 사대 매국 세력은 다같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속에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결사 사수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남북 사이의 반목 대결과 분단 고착만이 그들이 살아 남을 조건이고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인간의 기본인권을 지키며 이들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집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그리고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국회 투쟁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은 정치권의 또 다른 야합으로 완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 또는 형법 개정론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름만 바뀌어 놓은 채 반국가 단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체입법이나 형법개정론은 결사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만이 이 땅에서 인권 침해를 막고, 자주 통일을 이루며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필자의 허락을 받고 회지에 실는 것입니다

일본 2004년 『신방위계획대강』 미국과 '중국/북한위협론' 공유, '공식적인' 군사대국으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이 준 규

주일미군재편과 자위대의 합헌화 추진 등으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이 발표되었다. 지난 해 12월 10일 일본은 1995년 개정했던 방위계획대강을 대체하는 신방위계획대강(이하 신대강)과, 이에 기반해서 2005년부터 2009년 일본 군비정책을 좌우할 차기중기방위력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그 내용은 2004년 방위백서 (이에 대해서는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2004년 방위백서 일본판 군사혁신 참조) 기초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방위백서와 신대강에서 일본은 군사혁신(RMA)-군의 첨단화-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으로서의 일본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창설 5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합헌화만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북한과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명시

신대강은 9.11 동시다발 테러이후,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과 대량파괴무기(WMD)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확산 등을 “새로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신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일본 주변정세에 있어서 “중대한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양 활동 범위의 확대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향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이미 지난 7월 발표되었던 2004년 방위백서에도 명기되었던 내용이다. 이번 신대강에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반복되면서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방위계획대강에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중국을 자극했던 중국의 일본 가상침략시나리오, 중국 잠수함의 일본영해 침범으로 인한 양국간 신경전 등의 기저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대중국(對中國) 인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위협 인식이 미국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위백서와 신대강에서 일본은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 해군 및 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위협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미일동맹의 재정의가

어떠한 맥락에서 추진되어 왔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보에 있어서 미일 일체화, 자위대 해외파병은 「본래임무」로 격상

또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안정은 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지역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중동과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미국이 “불안정한 호”(弧)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바로 이 지역은 미국이 육군 제 1군단 사령부를 일본의 자마로 이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관할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주일미군 재편의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대강은 이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를 명기한 것이다.

이러한 정세인식하에서 '국토방위'에 주안점을 두어 온 자위대의 위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자위대의 임무를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국제테러 대책 등에서도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 자위대법에서 “부수적임무”로 되어 있는 자위대의 해외임무 수행을 “본래임무”로 격상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신대강은 “자위대의 임무에 있어 동(同) 활동(해외임무수행)의 적절한 위상을 포함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활동 증가와 필요성의 증가에 부응해서 “파견을 위한 교육훈련”과 “부대의 대기태세”, “수송능력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방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의 대기태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경우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후 “30일 이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상시화하겠다는 의지의 적극적 표현인 것이다.

해외활동에서의 자위대 역할- 사실은, 자위대 무력의 해외투사라고 볼 수 있다 -의 확대는 미일 안보의 일체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신대강은 이 부분에 대해 이라크에서의 미일 협력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미일안보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군재편을 통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전략 대화에 심혈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D 추진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신대강이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체제를 확립”해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신대강』과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각의 결정한 같은 날 발표한 관방장관 담화에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공동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제적인 무기거래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공동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생산 및 초기 배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미사일방어 운용개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에서 발표된 정부통일견해로서 비핵 3원칙과 함께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무기수출 3원칙은 정부 안보정책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이미 논란이 되었다. 특히,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충돌을 빚는 부분이었다. 냉전, 탈냉전기를 통틀어 세계적으로 웬만한 분쟁이라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첨단과학기술분야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방위산업관련 업계와 방위청,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방위족'(防衛族) 의원들의 완화, 재검토 압력이 지속되어 왔었다.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이 공동개발의 단계를 지나 생산단계에 접어들면서 무기수출 3원칙은 바야흐로 완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 관방장관 담화는 “미사일방어 관련 기술을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전후 일본 안보정책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출 3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참고로 12월 14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방위청이 “미국과 MD관련 MOU(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OU는 이번주 중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 레이더의 성능 향상-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을 위한 공동연구와 적외선 탐지기, 제2단계 로켓 모터,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하는 동역학탄도 등 일본 무기기술의 대미(對美) 공여와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D운동을 위한 미일 공동계획의 수립과 기구 설치 등 MD 실전배치와 운영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미, 신대강과 함께 각의 결정된 2005년-2009년 차기중기방위계획은 MD시스템 배치에 5,000억엔을 책정했다.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위력

방위백서 2004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대강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가 방위력 공백 지역인 남서 도서(島嶼)지역과 게릴라, 특수부대 등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대를 중앙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육상자위대 정원을 5,000명 축소한 15만 5,000명으로 하고, 전차와 전투기, 호위함 등 재래식 무기를 감축기로 한 대신 MD 등 첨단무기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부대의 신설과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장치를 전투기에 탑재하는 기술개발이 착수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부대를 신설하는 것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자국 영토 방위를 개념으로 하는 전수방위에서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공중 급유기는 과잉전력이기 때문이다.

공동작전계획 5055와 일본의 군비증강

12월 12일 아사히신문은 신방위계획대강 작성의 지침이 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이하 작계 5055)를 보도했다. 작계 5055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수백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이 일본에 침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작전계획이다. 여기에 상정된 하나의 케이스가 북한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 열도에 상륙 침입하는 것이다.

작계 5055는 첫째, 공격을 받고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 구난 등 미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둘째, 미군이 출격하고 보급받는 거점 기지와 항만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 시 육상자위대는 경호 대상으로 미군기지와 일본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 주요시설을 리스트화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접한 해안에 호위함과 초계기를 대기시키고 공작선의 침투를 경계한다. 또한, 부유기뢰의 소해 등을 통해 한반도와 큐슈 북부를 연결하는 수송루트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수집을 하고 C130 수송기로 한반도에서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작계 5055는 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즉, 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구성된 자위대 통합 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사령관이 참여하는 공동계획 검토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며, 9·11 동시다발 테러 후 처음으로 미일 군부에 의해 조인된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떠들썩했던 중국의 일본열도 가상침략시나리오도 신대강과의 관련성 때문에 주목받은 바 있다.

신가이드라인과 그에 기반해 제정된 주변사태법에서는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 및 수색, 구조활동, 미군 병력의 수송’ 등을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반도, 대만,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역범위를 포괄하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반도 유사와 대만 유사 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결국, 탈냉전기 미일동맹 재정의가 중국과 북한 위협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일동맹 재정의에 편승해서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명분도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북한 위협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 군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이유로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출혈적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 기 고 |

주한미군 주둔 54년, 동두천은 꿈틀대고 있다 !

동두천시민연대 상임대표 강 홍 구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나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특정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곤 한다. 그렇다면 '동두천' 이라는 세 글자의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연상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지촌' 일지도 모른다. 기지촌, 소위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 대한 폄하적인 인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50년이 넘게 인식되어오면서 마치 동두천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기지촌(基地村)[명사], 외국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행위 따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의 동네라고 적혀있다. 과연 동두천이 국어사전의 풀이대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해서 상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일까?

한마디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두천을 기지촌이라고 부리는 근거로 따져 본다면 용산, 군산, 인천, 대구, 평택, 부산, 원주 즉, 대한민국 전체가 기지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지난 60년 미국의 강점에 의해 국적 불명의 단어가 생활어가 될 정도로 익숙해 진 것이다. 더 이상 동두천은 기지촌이 아니다. 동두천은 민족 분단의 모순을 처절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이며, 민족자주통일 전선에서 우리가 함께 뛰어다니고 가야 할 우리의 과제가 응집된 곳일 뿐이다.

지난 2004년 미국의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주한미군 관련 운동사 속에서 1992년 동두천 윤금씨 살해사건이 제 2의 전환기였다면, 주한미군 관련 운동 제 3의 전환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주한미군기지 관련 운동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맞선 수동적인 입장에서 전개해 왔었다면, 이제는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주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치적인 반미운동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운동으로, 지역의 자주권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되찾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로운 전환의 기운이 지금 동두천에서 움트고 있는 것이다.

동두천지역의 새로운 반미자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의 실태에 대해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두천은 1951년 미 7사단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를 포함하여 5개의 캠프와 1개의 미군 헬기장, 2개의 훈련장이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1/3이 넘

는 1250만평에 산재해 있다. 지역공여지나 임시공여지를 포함하면 동두천의 2/3를 미군이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동두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군의 주둔 병력은 이라크 전쟁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1/3 가량인 12,000여명이 있었다. 동두천은 미군기지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주한미군 관련 산업 이외,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갖지 못하고 기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주한미군 관련 산업이 쇠퇴(경제발전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군 관련업 종사자 이동)하면서 동두천시는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2004년 현재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율 전국 최하치인 20%대의 열악한 도시로 전락한 채 실질적인 지역경제발전이 멈춘 지 오래다.

단적인 예로 동두천시가 인구 7만여명 시점에서 시로 승격 된지 25년이 되어가지만 인구가 25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2004년 기준 7만 5천여명 대)과 경기도 지자체별 평균 제조업 비율이 50%대인 반면 동두천시는 8%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4년간 동두천이 미군기지 주둔의 결과로 받은 선물(?)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 해부터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과 미 2사단 주병력(약 3,000여명)의 이라크전쟁 파병으로 동두천 지역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전국적인 불황과 맞물리며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동두천 시민들은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미군주둔지역 경제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의회 중심으로 한 지역대책위가 1년이 넘게 투쟁해 오고 있다. 이것이 동두천이 전국의 수많은 미군주둔지역 도시와 다른 점이다. 미군 주둔과 함께 80년대 초까지는 미군과 관련 산업이 동두천을 가시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두천 인구 증가의 원인이었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미군기지는 동두천 발전의 저해요소이자 동두천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동두천시와 동두천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생존권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 반환 및 활용의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동두천지역 미군기지만환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지반환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간과했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미군기지 부지의 원소유자 문제이다. 대부분의 원소유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정부를 대신해 현 시세의 공시지가로 환매를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이다. 결국 동두천지역의 반환될 미군부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나 돈 많은 땅투기꾼의 몫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군기지 반환 대책운동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와는 동떨어진 감성적인 운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미간의 예측적인 관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지반환 활용(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선도적인 반미자주투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 바로 한국정부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 환매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연한 미군기지의 무상반환보다는 대안적으로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빼앗은 미군기지 부지는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미군기지 부지는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합법성을 취득해야 한다. 그것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실질적으로 풀어내

기 위한 주춧돌을 세워내는 것이다.

동두천지역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기지 내의 민사처라는 기관에 의해 원주민들이 강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원주민 소개는 유엔경찰이 담당하였고, 52년 11월 말경 끝났고 56년 징발당한 원주민들에게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고, 토지징발 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으며, 가옥을 포함한 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되었다. 토지보상도 지주에게만 보상되었고 그 형태는 국가발행 채권이나 징발 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대부분 원주민들이 소실하였고, 원주민 대부분이 강제로 뚝값보다 못한 그 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징발과정이나 보상기준 및 절차 그 시대의 정치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함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이의제기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보상의 기준, 근거, 절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우리 단체가 지난 수년간 원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강제 징발당한 토지의 면적은 징발증이 있어 알고는 있지만 추후에 그 보상금액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다. 게다가 원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포괄승계인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정확히 알기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원소유주나 그 포괄승계인들이 보상금액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에도 소위 브로커들이 판을 치며 보상금을 더 받게 해 준다면 원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간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징발증만 가지고 있을 뿐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현재 등기상으로도 그 당시 브로커나 그 자손들이 원소유주로 둔갑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관련 기지이전 및 반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반미운동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 속에서 시작되고 그들과 함께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운동의 첫걸음을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부지 원소유자찾기운동을 시작으로 원소유자 모임을 결성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지 토지징발 원칙적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토지 징발 당시 전시장태에서 강제로 토지를 징발하고 적법한 보상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토지징발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원소유자에게 강제로 징발한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한국정부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가 아닌 환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지역에서 약 1,000여명의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 추진위원단을 모집한 상태이며, 30여명에 이르는 원소유자(포괄승계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은 상태이다.

분단 60년, 미국강점 60년!

동두천지역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새로운 국면과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운동! 이제는 지역주민들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생존권을 해결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 전술적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속에서 미국의 본질을 폭로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 근거를 무력화 시켜내면서 지역주민의 민족자주 의식을 지역주민 생존권 사수 투쟁에서 발전시켜 내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지금 당장은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가는 것이 결국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2005년 동두천!

주한미군 주둔 54년, 잃어버린 동두천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운이 지역주민들의 가슴속에서 긴 겨울을 이겨내고 움트는 생명처럼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동두천은 미군기지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주한미군 관련

산업 이외,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갖지 못하고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2004년 현재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전국 최하치인 20%대의 열악한 도시로 전락한 채 실질적인

지역경제발전이 멈춘 지 오래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따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땅투기를 하려고 한다. 결국 동두천지역의 반환될 미군부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나 돈 많은

땅투기꾼의 몫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통사 모임을 찾아

전북 군산 모임을 찾아

한 낮의 햇볕이 따사롭다. 컴퓨터 앞에서의 탈출이 평일 그것도 대낮에 이루어졌다.
강남고속터미널에서 3시차를 탔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은 외투를 벗게하고도 땀을 흘리게 했다. 지금이 1월달이 맞나? 겨울의 이단아라 불러야하나? 오랜만에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하며 저 남쪽 군산으로 향했다.
다른 사무처 일꾼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 앞에서 시름을 하거나 집회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밖의 날씨가 좋은지 신경도 못쓰고 끄끄대는 모습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평일이고 낮시간임에도 버스 뒷좌석 3자리만 비고 모두가 만원이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뭘까? 나같이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나? 아니면 가정주부들인가? 아저씨들도 많던데....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지만 별다른 해답을 못찾고 바깥 풍경만 쫓았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아주머니가 한 아들은 옆자리에 앉히고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힘겨운 자세로 졸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이 이처럼 처절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악착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약 3시간 걸려 목적지인 군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올라갈 차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심야고속이 있긴 했지만 도착할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졌다. 어찌 오자마자 올라갈 걱정을 해야하나.....
군산터미널에서 택시타면 금방이다란 말에 택시를 타려고 하니 기사들이 목적지를 모른다. 애구애구 속았다. 겨우 4번째 택시를 타고 해뜨는 마을(아파트) 안에 있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했다.

2층 강당에 올라가니 마음씨 좋게 생긴 청년이 의자를 나열하고 있었다.
군산모임 최영목 회원이다.
너무나 반가웠다. 평통사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 나와 6시 30분에 겨우 목적지에 온 것이다.

7시 강좌 준비 때문에 인터뷰는 나중에 미루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 1층에서 커피를 뽑고 두리번 거리는데 트럭 한 대가 서더니 웃고 있다.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이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든데...” 인사 첫마디가 잘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힘드시죠? 뭔가 뼈가 느껴진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는 옆집에서 오라는 듯이 올라오라고 한다”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하다. 오자마자 서울에 올라갈 걱정이 드는 판이니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서울에 가끔 올라올 때 가볍게 맞이했던 것이 찝찝했다.
오늘은 군산모임에서 모임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2회 평화강좌를 하는 날이다.
전국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산을 간략히 소개하면
“군산은 약 26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으며 현재 서쪽으로는 서해안 바닷가에 접하여 있으며 새만금 사업의 끝자락입니다. 몇 년전 서해안고속도로와 전주, 군산 고속화도로가 생김으

로 교통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지요. 아직까지 영 신통치 않지만요. 요즘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결식아동 도시락사건이죠 그리고 군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직도로 매항리 폭격장이 이전한다고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군산은 바닷가와 접하여 있고 일제 강점기에 곡창지대여서 수탈의 현장이었어요. 참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오는 징개맹갱 들녘이 여기라고 하네요. 또한 군산미군기지가 있지요. 대략 125만평에 미군 7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모임 최영목 회원)

군산모임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나 전북평통사가 전북지역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서울의 염창동이네, 응암동이네와 차원이 다른 것은 아시죠?) 사무실은 현재 익산에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 사무실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지역모임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군산은 익산에서 승용차로 40분~1시간 거리라고 한다.

군산모임은 전북 평통사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던 회원들이 직장과의 결혼 관계로 군산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따로 갖기 시작했고, 현재 서동완 모임장을 중심으로 최영목 총무와 황현정, 김성자회원이 모임을 조출하게 하고 있으며 최연소 회원인 최정회원이 최근 회원가입을 했다한다.

4명은 부부사이이며, 1명은 21개월된 이쁜 공주님이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제2회 평화강좌는 ‘한미동맹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평화통일연구소장 강정구 교수의 강의와 군산미군기지 현황에 대해 민주노동당 전라북도 김민아 도의원을 모셔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특이한 것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군산지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후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서동완 모임장이 대우노동조합 전위원장이며 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서이고,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이 전도사 출신이라서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우노동조합에서 자체 간부수련회가 있음에도 3분이나 참석했고, 평화강좌 장소인 복지관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도 함께 하셨다.

전북평통사 이세우 대표님도 목사님이고, 홍근수 상임대표도 목사님이고 회원 중에서도 신자들이 많아 평통사와 종교가 묘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착했다. 자료집과 회지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받아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입구쪽에 앉아 있던 저에게도 분명 처음보는 얼굴이지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다.

시작시각 10분 전. 일찍 온 사람들은 서로 익숙한 듯 삼삼오오 악수하고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뒤쪽에서 하나 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니 서울이나 전북이나 똑같은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 앞자리는 비워두고 뒷자리부터 앉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말이다.

드디어 군산모임 서동완 모임장의 사회로 제2회 평화강좌를 시작하였다.

서동완씨는 넥타이 없이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한 덩치에다 짧은 스포츠머리라서 누군가가(?) 연상되기도 하였다.

전북에서는 행사를 할 때 글씨를 뽑지 않고 박영천 운영위원이 직접 쓴다고 한다.

“영천이형이 한 글씨 하는데 어제 술을 너무 먹어 저렇게 나왔다”며 누군가(?)가 컷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강정구교수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첫 얘기가 너무나 인상 깊었다.

“제가 1945년도에 태어났어요. 제가 살아오는 과정이 해방의 역사요, 분단의 역사였어요. 앞으로 1달 후에는 환갑을 맞는데 해방60년 분단 60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다 보니 밤잠을 못이루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냉철히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탐구하고 전진하는 모습.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랄까?

아무튼 강의시간 내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란 강사의 목소리와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뿐.

김민아 도의원의 강연은 군산미군기지에 관한 사례발표 형식이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새만금 용도 중 미군기지 앞 100만평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군산 미군기지가 확장되며 최신평 전투기, 전폭기가 배치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짧은 질의 응답을 거쳐 옆 방으로 옮겨 신나고 즐거운 뒤풀이가 이어졌다.

평화강좌가 7시에 시작했으니 저녁 식사를 못한 사람들도 많았으리라.

그런데 벌써 9시30분이 넘었으니 또한 강의 내내 조용했으니 입운동도 해야하고..

황현정씨와 김성자씨는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옆에 나란히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다.

모임 얘기를 하는 걸까? 남편 홍보고 있는 걸까?

군산모임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모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과 더 폭 넓은 회원확대를 하는 것이 고민점이라 한다. 또한 군산지역에 맞는 사업을 고민 중이라 한다. 앞으로의 군산모임 활동에 기대가 되는 것은 가족같은 친근함과정이 바탕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평통사 회원 여러분!

전국군산모임의 밝은 앞날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정(情)이라는 초코파이(?) 하나씩 선물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회원글 |

노동관련 상담사례
미취!....겠다.... (미안하다. 사기쳤다.)

부천평통사 장 해 영

청년실업 50만시대.. C폴~! 초장부터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말이 50만이지 학교에 양다리 걸친 만년휴학생부터 알바, 단시간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그 수가 짐작이 간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묻지마 취업”이 기승을 부리고 그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월급 120만원을 약속하고 입사했는데 한달 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80만원 밖에 못준다.”는 뻔뻔한 사장이 그 전형이다. 그것뿐인가? “고소득보장”, “배우면서 돈 벌어요.” 등의 사탕발림으로 구직자를 유인한 후 명의도용 카드발급을 알선하거나 피라미드식 상품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급기야는 학원수강을 해서 개인가치를 높이라는 뜬금없는 제안까지 하는 등 청년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취업사기도 눈에 띈다.

얼마전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상담소에 온 김모군의 사연은 이랬다. 수십번의 이력서 제출 끝에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고임금과 흡족한 노동조건으로 OO출판사에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취업 축하 세례에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회사는 2주간 여벌옷 등 출장갈 준비를 하여 새벽같이 회사 앞으로 오라는 첫출근 지시를 내렸다. 처음 3개월은 현장 학습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장학습의 내용은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회사에서 만든 XX 교재를 판매하는 현장 영업이었다. 밤에는 허접한 숙소로 들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구호를 세 번 외치고, 교재가 얼마나 과학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현장의 감각을 익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김모군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현장 영업기간 연장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만에 다시 청년실업의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다.

김모군만의 일이 아니다.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노동자의 조급함을 틈새시장인 듯 노려 젊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악질 사용자들이 갈수록 판을 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미비하기만 하다.(허위·과장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대부분 주의나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나갈 청년들이 졸업 후 접하는 노동시장의 고단함을 어찌 그 청년의 운 없음이나 본인의 자질문제로 묻혀버릴 수 있겠는가? 이제 청년백수는 잉여인력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계층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친다!

전국의 청년백수들이여! 단결하라! 단결하기 전에 아침밥 꼭 챙겨먹는 것은 잊지 말고....

| 평화상식 KMH

작년 한해, 평통사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결정해 야심차게 진행해오던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에 대한 예산(348억원) 전액을 삭감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우리는 집회와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면담 등을 통해 KMH사업의 소요제기 문제,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점을 끈질기게 알려냈다. 그 결과 2005년도 KMH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고, 대통령이 참가한 정책회의에서 KMH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재검토에 들어갔던 KMH 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재추진 방침을 결정하면서 공격형과 기동형 동시 추진의 기존방침을 변경하여 ‘기동헬기 개발 후 공격용 헬기에 대해 판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타당성이 결여되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사업을, 정부는 타당성 검증도 없이 변형하여 재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타당성이 결여된 KMH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욱 힘찬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1. KMH사업이란?

- 한국형 다목적 헬기 (KMH : Korea Multi-role Helicopter)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헬기 (공격용, 기동용) 500MD, UH-1H, AH-1S 등 480여대가 노후화되는데 따라 대체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는 것임.

2. KMH사업의 문제점

1) 남북 헬기 전력 비교 측면

- 남한은 북한에 비해 3배나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7위를 자랑하는 헬기보유국이다. (남북 헬기 전력비교 690 : 230) 노후화된 헬기를 도태시킨다고 해도 북한보다 많은 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 헬기 전력 비교를 감안해도 새로운 헬기 개발의 소요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2) 국내 기술적 측면

- 국방부는 우리 헬기개발 기술이 기술선진국 대비 평균 50~85%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스스로 답하도록 한 자체 설문 조사형식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나, 2001년 성남 에어쇼의 부대행사로 항공산업관련 사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개최하는 ‘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라는 행사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기동헬기든 공격헬기든 현재 한국 기술력의 수준은 ‘개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조립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 KDI보고서조차 국내기술로 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갖고 ‘직구매 카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경제적 측면

- 감사원의 KMH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산업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 애초 국방부는 낮은 경제성을 의식해 ‘공통형상을 통한 기동 및 공격용 헬기의 동시 개발’을 고집하였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부가 방침을 정한 기동헬기를 국내 개발 생산한 후 공격헬기는 추후 결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기모순 논리를 갖고 있다.
- 또한 세계 유수의 헬기업체들의 경우에도 새 헬기 개발에 최초 예산보다 300~1000%까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추세이다.

3. 현재 진행 상황

- 지난 1월 18일 NSC는 ‘KMH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기동용을 먼저 개발하고 공격용은 추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KMH사업 명칭이→KHP(Korea Helicopter Program)로 바뀌었다. 정부는 기동용으로 299대를 개발하겠다는 것만 발표했지, 소요대수,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 등 KHP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어떠한 검증도 절차 없이 ‘백지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토막정세읽기 |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없다 공식 발표

2005년 1월 14일

지난 2년 동안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아 온 미국의 노력이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스콧 맥클래런 백악관 대변인은 1월 12일(현지시간) "이라크에서 WMD를 찾으려는 노력은 공식적으로 완전 종료됐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노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 2003년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이 살해당했다.

2005년 국방관련예산 23조 5641억원 책정

지난 17대 국회를 통과한 2005년 국방예산은 20조 8226억원으로 전체 예산 131조 5110억원의 15.83%에 이른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5%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8814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방위비는 국방부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병무청 예산 1306억, NSC 예산 50억원, 전·의경 지출예산 2374억원, 군인연금특별회계 1조 6608억원, 국방국유재산특별회계 679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5억원을 합산하면 총 23조 5641억원에 이른다.

美日, 새 아태 지역 전략목표 설정...

中 대만 침공 반대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의 전략 목표를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은 2월 19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상,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이른바 2+2 회담)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상호 안보 우려 사항으로 규정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 해결 추구를 양국의 공동 안보 관심사로 처음 제시하고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서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양국의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공동 전략 목표도 설정했다.

이처럼 양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전략목표는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지난 19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따라 양국 안보협력을 일본 방위를 넘어 '주변사

태'로 넓힌 바 있다.

양국은 이번에는 미일 안보조약을 재검토하지 않는 대신 공동전략목표라는 이름으로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를 일체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02년 말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 가을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할 방침이다.

미국, MD 요격 시험 또 실패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미사일 요격 실험에 실패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 실패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구상했던 미사일방위(MD) 체제 구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 MD시스템 구축 완료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미국 미사일방위청(MDA)은 "태평양 마셜군도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시험기지에서도 요격용 미사일이 가상 목표 미사일을 향해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릭 레흐너 MDA 대변인은 "1차 조사 결과 요격미사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발사 기지의 지상 지원장비가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험 당시 모의탄두를 장착한 가상 목표 미사일은 오전 1시 22분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액섬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그러나 요격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아 가상 목표 미사일은 태평양에 떨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에도 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으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요격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요격미사일 실험만 10차례 실시했으나 그중 다섯 번만 성공했다. 이번 실패에 충격을 받은 국방부는 아직 추후 시험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꺼지지 않는 촛불

‘이 땅은 우리의 목숨, 단 한 평도 줄 수 없다!’며 시작된
평택 주민들의 촛불행사가 어느덧 해를 넘기고 200일을 맞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을 피해 비닐하우스로 옮긴 지 몇 달...
새순 돋는 소리가 바람에 실리더니 이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촛불을 들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환갑도 훨씬 지난 동네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얘기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2003년,
주민들은 그냥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다”는 발표가 나더니
50년 전 이미 쫓겨나 더 이상 갈 곳 없는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방부, 경찰, 국정원 직원들은 마을을 수시로 드나들며 감시를 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킬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일 촛불시위가 보여주듯
주민들의 의지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식을 줄 모릅니다
분열시키려 해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곳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주민들은 시린 겨울 칼바람을 촛불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농사짓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 없던 노인들이
저 거대한 제국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까지 이런 고통 겪게 하믄 안 되잖어..."

오늘도 촛불을 놓지 못하는 대추리 노인의 소망입니다
글·사진 / 김현진

| 따뜻한 소식 |

세상은 참 따뜻해요

안녕하세요

E-mail은 진작에 받았는데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멀리 미국에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은 돈이나마 보냅니다.
몸으로 함께 못함이 아쉽지만 더욱더 열심히 마음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면 한 번만 소식지를 받아봐도 될런지요?

물론 인터넷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소식지를 손으로 만져보고 싶네요.

참 그리고 저희 남편의 동의는 물론 받았고요.

-사실 이렇게 한국으로 송금하는 걸 먼저 제안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럼 미리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하는 미국에 사시는 동포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분은 매달 꾸준히 후원해주시고 있습니다.

000선생님을 비롯해서 평통사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서평 |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짜기’

김민웅 교수

주장의 시대가 지나 논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논리에 철저히 봉사하는 논리를 펴는 전문가들이 나서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해서 지금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짜기’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미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연구의 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책이 줄 수 있는 증언의 능력, 논증의 힘,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 2월 17일, 향린교회에서 열린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짜기' 출판기념회에서 있는 김민웅 교수의 서평을 녹취, 발췌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반갑습니다.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짜기’ 책에 대해 얘기해야겠죠.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적이고 침략적인 길로 갈 것인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길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점. 이것은 기로에 서 있다는 것도 되지만 가능성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짜기’입니다. 새 판을 짠다는 것은 과거의 판을 뒤엎는다는 뜻이죠. 뒤엎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에는 또한 지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성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자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영희 선생님께서도 여기 오셨지만 ‘전환시대의 논리’가 나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세대에게는 엄청난 스승이셨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질서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자란 청년 세대가 30년 뒤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패권시대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쉽지 않은 시절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23년을 지냈습니다만, 애초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공부하면서 점차 ‘미국이라는 나라를 20세기, 21세기에 알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10년 지났는데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의문의 제기

회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미국, 이거 아니지 않는가? 1979년에 박정희 체제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 중에서 적지 않는 수가 미국이 뭘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상태였죠. 그때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인지경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장의 시대가 있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논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과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이 특히 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경제를 공부했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 미국에서 공부한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철저히 미국의 패권주의의 논리에 봉사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깐 일반인들은 미국이 뭔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내용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의 자주화 투쟁 과정에서 운동권의, 우리 일상의, 우리 사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전문가들이 나서면 보통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많이 변해서 지금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역량은 아주 깊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용산기지가 옮겨지는 것일까, 왜 지상군을 감축시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정체를 이 책은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양보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철저한 새로운 탈냉전시대 후에 세계를 전쟁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제국의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었다는 점,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는 점,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의 미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연구의 힘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것을, 향후에는 아까 임종인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대중들에게, 또 청년세대들에게, 이러한 민족과 역사에 관심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남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발표가 있고나서 국내 언론의 보도는 두 가지 경우로 압축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핵무장 공식 선언’, ‘6자 회담 무기한 불참’

그러나 북한의 외무성 발표를 분명하게 읽는다면, 초등학교를 나온 실력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제목을 달 수 없습니다. 북한 외무성 발표의 골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의 6자 회담의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방식,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핵무장 체제의 등장이다, 따라서 핵무장을 해제하자는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6자회담에 언제든지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참여의 용의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변함없이 핵무장 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호관계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길이

있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읽게 하는 국내 언론도 문제이겠지만 이것에 대한 근간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도를 우리 사회가 읽어내는데 실패한 것이겠죠.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이 줄 수 있는 증언의 능력, 논증의 힘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매체와 또 운동 현장에서 쉽게 풀어서 읽히는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 역사의 운명이라는 것에 얽혀있는 개인의 힘, 개인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의 저하교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한 인연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맺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같이 있게 되었죠.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 오늘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근수 목사님 또한 미국에서 저하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헌정 목사님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앞장 선 강정구 교수님의 인연 또한 아주 깊은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이철기 교수님, 박기학, 서재정, 최철영, 고영대, 손석춘 동지 모두 이런저런 인연으로 관계를 맺게 된 분들입니다.

참 묘하죠?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의 어떤 역사의 힘으로 쪽 밀고 나가서 역사의 한쪽을 하나하나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으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이러한 자리가 그 힘을 확인하는 자리고 이 책과 함께 그 힘을 안고 새판을 짜는 능력을 이 사회에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 책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서 함께 모인 이 힘이 새판을 짜는데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11기정기운영위원총회및출범식 >>>>

평화와 통일의 희망! 평통사,

2005년 SPI 반대 투쟁을 결의하며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축하

평통사를 이끄는 사람들

평통사 고문, 자문변호사, 지도위원 인사

‘평택 미군기자 확장반대’ 투쟁을 결의하며

가톨릭대 몸짓패 무친의 축하공연

평택 지장물 조사 거부 투쟁 >>>>

주민들은 마을로 몰래 들어온 주택공사 직원들을 몰아냈다.

'지장물조사 결사반대' 주민들이 도두 2리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걸고 지키고 있다

국방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 감정원

직원들을 안내하던 평택시청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에 의해 쫓겨나는 장면이다.

주민들에게 막혀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국방부 등 직원들이 헬기를 동원해 항공촬영을 하고 있다.

| 자료실 |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역할확대 노린 미2사단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 미2사단은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변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미2사단의 UEX로의 변환은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대북 방어형 불박이 군에서 중국·대만 분쟁과 같은 사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미2사단의 일방적 변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미2사단의 UEX로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UEX로 변환이 완료되면 미2사단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에 에이브럼스 탱크, M270A1 최신에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여단'으로 재편된 데 뒤이은 것이다.

미2사단 변환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원거리작전' 곧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락시키고, 북한에 대한 초정밀선제공격능력에 날개를 달려고 하는 것이다. "UEX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의 임무수행도 가능한 최고 5개 여단을 지휘·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긴스 미2사단장의 발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역할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물론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동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무제한적 군비경쟁으로 내몰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미2사단 변환 계획이 갑자기 2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선제정밀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분명한 미2사단 변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국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2사단 변환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협의하기로 한 지난 2월의 SPI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미2사단 변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정부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고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미국의 행위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위한 준비를 자신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SPI회의 등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여기지 않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 여름까지 미2사단 변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의 11월 발언이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3월 8일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2사단 변환과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관철하려는 고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라는 선언을 구체적 현실에서 확고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에서처럼 점진적·단계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저의를 원천 봉쇄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승미사대주의에 찌든 일부 국방·외교 관료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건부 인정’ 등으로 대통령 발언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미국의 주한미군 동북아 분쟁 개입 의도에 길을 터주는 것을 막는 방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남한방어로 한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제공, 병력과 무기의 배치, 이동, 훈련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 마련 및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요구하고, 미국에의 군사적 종속을 허용할 어떠한 상설적인 한미군 사협의제도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